공사 한창인데 바닥 보이는 시멘트… 수급 불균형 어쩌나

현장 수요 늘면서 재고량 감소세
생산공장 보수에 주52시간 겹쳐
수도권 핵심물류기지도 운영 중단
업계 "수급 안정위해 최선 다할 것"

강원도에 있는 한 시멘트 공장 전경.

봄이 되고 건설 현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돌연 불거진 시멘트 수급 불균형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4·4분기부터 시멘트 수요 증가와 시멘트 회사들의 정기대보수 기간이 맞물리면서 재고가 줄고, 여기에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 조업 및 운반 차질, 수도권내 시멘트 핵심 출하기지 운영 중단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예상하지 못한 시멘트 수급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시멘트 출하량은 4704만톤(t)으로 2019년의 4948만t에 비해 약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내수 출하량은 2018년부터 3년째 감소추세다.

업계는 올해 출하량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전체 시멘트 회사들의 생산능력은 반제품인 크링커를 기준으로 연간 약 6028만t 규모다.

지난해의 경우 내수(4704만t)에 수출(528만t)을 더하더라도 업계 생산능력이 출하량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공급능력이 수요를 능가한다는 말이다.

기존 시멘트 회사들의 최대 재고량은 210만t 정도로 알려져있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 이후 3년 연속 급감했던 시멘트 수요가 지난해 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평균 126만t 수준이었던 재고량이 82만t까지 하락했다"고 전했다. 최대 재고량 기준으론 39%, 평균 재고량으론 65%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우선 계절적 요인이 크다.

시멘트 회사들은 통상 건설현장 비수기인 매년 1~3월에 대보수를 실시한다. 연중 가동하는 소성로(킬른) 등 제조설비 중요 부품을 교체하는 등 보수공사를 한 뒤 4월부터 시멘트를 공급하는 것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작업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에 따른 현장 작업 여건 변화에 개별 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 움직임까지 맞물리면서 신규 설비 확충, 보수기간 연장 등으로 가동시간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생산 현장의 이같은 변화와 함께 시멘트를 공장에서 수요처까지 운송하는 여건도 악화되며 수급 불균형을 더 부추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시멘트 운송은 철도수송이 40%로 가장 많고, 해상과 육상(도로)이 각각 3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런데 수도권내 핵심 시멘트 허브 중 하나인 광운대역이 역세권 개발사업 확정으로 인접해있던 시멘트 물류기지가 지난해 12월 말 문을 닫았다. 여기엔 삼표시멘트와 현대시멘트가 각각 1만t 규모의 사일로를 운영해왔었다. 타 시멘트 회사들도 필요에 따라 두 회사의 사일로를 임대해 사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문에 가장 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시멘트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광운대역에 물류기지를 운영해왔던 두 회사는 대형 사일로를 설치할 대체부지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14만8166㎡에 달하는 코레일 소유의 철도·물류시설 용지와 국공유지에 업무·판매, 컨벤션, 영화관 등을 포함하는 서울 동북부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힌다.

업계에선 이처럼 역세권 개발과 철도 복선화 등으로 전국적으로 5개 철도 노선이 폐쇄되면서 연간 100만t 의 시멘트 수송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로 운송을 책임지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행감소도 시멘트 수송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BCT 기사들이 운임이나 작업여건이 더 좋은 컨테이너 운반이나 최근 급증하는 택배 분야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차량이 약 10~15%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BCT 차량은 기존에 전국적으로 2700여대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시멘트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이같은 현상이 좀처럼 해소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개별 기업들의 계절적인 생산 공장 점검·대보수가 끝나더라도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 제도적 여건과 님비현상으로 인한 대체 물류기지 물색 어려움 등으로 수급난이 당분간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업계는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수출물량을 긴급히 내수용으로 전환하는 등 추가로 시멘트를 확보해 약 50만톤 내외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급 차질을 사전에 막고, 수급을 안정시켜 건설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홈앤쇼핑 '라이브커머스' 젊어진다

MZ세대 공략 콘텐츠 개편

홈앤쇼핑이 라이브커머스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홈앤쇼핑은 라이브커머스 방송 '팡LIVE'를 한 주에 총 20회 정규편성하고 사내 공모를 통해 30대 초반 과장급을 팀장으로 특별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팡LIVE'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와 오후 9시에 고정으로 방송하고 나머지는 스팟으로 운영해 한 주에 총 20회로 정규편성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된 가운데 TV홈쇼핑 주요 고객 40·50대 주부들 외에도 20·30 MZ 세대의 유입을 기대하면서다.

지난 1일 진행한 '팡LIVE'방송은 1시간 동안 25만뷰 이상을 기록하며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홈쇼핑 업계의 주요 고객이 주부들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다. /김승호 기자

지난 1일 진행해 1시간 동안 25만뷰 이상을 기록한 홈앤쇼핑의 '팡LIVE'.

중기부, 노점상 4만명에 50만원씩 지급

사업자 등록한 노점상 대상
소득안정지원자금 200억

정부가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조건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가운데 올해 3월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끝낸 노점상들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3월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도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노점상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서 지원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가운데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 무료 교육'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미래지킴(역량강화) 과정'을 비롯해 '2021년도 노란우산 고객지원 교육'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무료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소상공인 경영의욕 고취와 재충전을 위한 힐링캠프 ▲장수 상인의 성공비결 및 상인정신 함양 지원을 위한 상도 트립 ▲자녀대상 조기 경제·금융교육을 통한 경제리더 육성을 지원하는 자녀 경제캠프 등 5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김승호 기자

정부, 사회적경제기업 17곳 성장 지원

10개 부처 힘 모아 소셜벤처 등 육성

10개 정부부처가 손잡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17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여기에는 소셜벤처(오버플로우, 더치트, 링고애니, 케이오에이), 사회적기업(29일, 오디에스 이풀약초협동조합, 상상우리, 공연제작소마당), 협동조합(장구리협동조합, 전주오피스문구협동조합, 잉큐영어교육협동조합), 마을기업(제이샤, 아낌없이주는나무, 농부들의카페장터), 자활기업(에이치디건설협동조합, 크린케어)들이 두루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도약지원' 대상 11곳엔 최대 1억원(자부담금 20%), '스케일업' 대상 6곳엔 최대 3억원(자부담금 25%)을 각각 지원한다.

10개 부처는 업력 4~10년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평가 후 적합 기업을 추천하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 가치 부합성'과 '금융지원 타당성'을 고려해 대상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지원 후 우수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온라인 시장 진출 등 정책수단과 연계하거나 사업별 가점 부여 등 후속 연계 지원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버스티비 J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野 "선관위가 여당 선대위냐"… 참다 못해 항의방문도 /사진 뉴시스
▲ 서與 "진실 말하는 '생태탕집 가족'에 해코지·협박 쏟아져"
▲ 유혈 사태 악화에 미얀마 탈출 행렬… 교민 411명 귀국
▲ "올해 초 전술핵 개발 선언한 北, 핵실험 재개 가능성 있다"

▲ SH·GH도 부동산 거래 제한·투기이익 몰수… 한병도 발의
▲ 국방부 "韓中 2+2 외교·안보 대화 재개되면 적극 임할 것" /사진 뉴시스